

### 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

# 전북 특수성 담아... 특자도로 새롭게

#### 농생명산업 육성·이민 권한 광역 이양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공 관리 등 중심 구성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와 보다 강화된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독자권역으로 인정되어 각종 특례(特別) 규정을 통해 여러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고,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신 출범에 앞서, 지난달 30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북민의 '특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완화 등 내용을 담아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들여다 볼 수 있다.

특례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친환경 산악관광복구 지정·육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9월 한 달 동안 총 8편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분야를 살펴보면, 전북은 과거 전통적 농도 및 식량생산 기지로서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 농생명산업의 선도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농생명산업지구 기반계획 수립(제16조) 및 지구 지정(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제19조), △진흥사업 지원(제21조), △근층산업 육성(제22조), △반려동물산업 육성(제23조)

등 농생명지구 내 지원사업 특례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특례(제18조) 등의 핵심 특례를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개정안에 담았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정부(농식품부) 정책목표 중 하나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정책에 부합하여 집적화된 농생명 자원·인력 등을 바탕으로 농생명 특화산업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지구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특화산업인 식품, 전자, 미생물, 스마트농업 등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각 분야에 규제 완화와 육성·지원 등의 개별 특례 마련으로 농생명기업 육성과 농가 소득을 끌어올려 고부가 국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 내에 농생명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전용 허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에 따라 농생명지구 내 농지 활용 특례를 마련해 농생명 산업기반 구축

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도 정부 및 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 활용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제26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우리 전북이 2024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선도자이면서 전북민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특례는 타 지자체에 없는 전북특자치도의 유일한 특례로서 기존 농생명 특화산업은 물론,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의 혁신산업 육성과 국가적 거점 역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 중 전북의 강점인 수호·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에 대해 보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민주 신영대 의원 군산서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오는 9일 오후 3시 전북 군산 드림교회 수송동성전 비전센터에서 '등대처럼 신영대 인터뷰' 출판 기념회를 연다.



문답 형식으로 신 의원의 지난 3년간의 정활동 등을 담은 책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급진도 개발 준고속철 추진 등 주요 지역 현안사업 해결 과정이 생생히 수록됐다.

또 최근 이슈가 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예금저축연금 1억원 상향법 등을 입법한 계기와 과정, 심사 결과도 소상히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에서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초선답지 않은 안목과 통찰력을 보여주며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뉴스



전북 정치·경제 원로들과 새만금 예산 대책 논의. 김관영 도지사는 4일 서울 인근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신상현 전 신한은행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대통령민수당 대통령 후보, 김홍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박영길 아주경제 회장 등 전북 도민회 소속 원로들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전북 여야 의원들과 함께 새만금 국가예산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 “이민정책, 인구 고령화 해결 가능성”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고등학교 해외유학생 유치 외국인 대학생 확대·광역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등 제안 “제도 개선 통해 이주민들과 사는 사회 조성 노력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전북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각 유형별 광역단위 이민정책의 실행을 제안했다.

법무부 출입국사절체류외국인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등록 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전라북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와 노령화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의 설치, 유학생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비자 등의 이민

확대 정책에 대응해, 전북 역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구성원에게 대한 이민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이민 분야의 특례 법안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해외유학생특성화고, △미스터고 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청년 인구의 댐 역할을 하는 외국인 대학생 확대 △광역지역특화형비자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고등학교 해외유학생 유치 방안으로는 이차전지 등의 신기술 분야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해외유학생의 유치·맞춤 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한 프로그램과 시설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대학은 국내적으로는 지식학 협력을 통해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국제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교육, 취업 및 정주를 앞선해 청년 인구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강조와 함께, 전북지역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유치·취업·수행·취업·정착·사회통합의 단계별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광역단위에서의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형비자를 전북지역 내 기업과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광역화 모델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 전희진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의 시행으로 이민자 유입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민자 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주민들과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

#### 13일까지 9일간... 조례·동의안 등 안건 처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5일부터 제40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33건을 심사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문화건설안 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이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실거주 우대정책 삭제한 전북특자치도의 유일한 특례로서 기존 농생명 특화산업은 물론,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의 혁신산업 육성과 국가적 거점 역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 중 전북의 강점인 수호·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에 대해 보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트럼프 패권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촉구할 계획이다.

본회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화북연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활동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9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트럼프를 위한 활동을 펼쳐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정책위원회 부의장(가운데)이 지난 2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민주주의 후퇴, 국민배신 정부규탄을 위해 비상사국을 선포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나서고 있다.

## “이재명 단식 투쟁 동참... 폭압정치 막아낼 것”

#### 최형재 민주정책위 부의장, 도청 앞 2일부터 천막 농성

내년 전주를 총선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민주당의 후퇴, 국민배신 정부규탄을 위해 비상사국을 선포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최 부의장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최근 일본 오염수 투기 목인과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등 윤석열 정부 실정과 이념전쟁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라며 "AI시대에 핵무기는 사상논쟁을 끌고 국가 역량을 허비하고 전라북도에는 쟁취로 회복 예산을 편성한 윤 정권에 강력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 나왔다"며 농성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동참해서 함께 힘을 실겠다"는 의미도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지난 2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밤샘 천막 농성에 나서고 있다.

최 부의장은 △일본 오염수 투기 국제해양환경조약 제소 △이념전쟁, 지역 혐오 부추기는 협외정치 중단 △트럼프 리 책임전가, 보복정치로 전북 죽이지 말라 △이재명 대표 탄압 중단 등 윤 정부 규정을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다"며 농성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동참해서 함께 힘을 실겠다"는 의미도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지난 2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밤샘 천막 농성에 나서고 있다.

최 부의장은 △일본 오염수 투기 국제해양환경조약 제소 △이념전쟁, 지역 혐오 부추기는 협외정치 중단 △트럼프 리 책임전가, 보복정치로 전북 죽이지 말라 △이재명 대표 탄압 중단 등 윤 정부 규정을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 정읍 식수원 안전 강화 발로 뛰다

#### 민주 윤준병 의원, 맑은물 공급과제 해결 나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정읍시 상수원 취수안정화 등 정읍시 육향호 녹조로 인한 수질 저하 대비 가뭄 등 비상시 응급대응 비상공급과 맑은물 공급과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정읍 시민들은 지역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윤준병의 토방청담(土防廳談) 등을 통해 육향호 수질문제와 취수원 부족 문제, 가뭄 시 취수원 확보대책 등에 대해 꾸준히 건의해왔다.

윤준병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2020년 4월 당선인 시절부터 전북도·정읍시 및 환경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먼저 수자원공사는 육향호 수질개선을 위한 육향호 녹조원인조사 용역을 수자원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추진키로 했다. 용역은 시민단체, 관련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민관협의회에 위탁해 시행되며, 8월중 발원된 부유물도 수거한다.

또한 지난 8월 17일 정읍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물 공급체계 확립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읍시 △수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모여 취수 위치를 윤양취수구에서 칠보발전차수구로 변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자원공사는 칠보발전소에서 방류된 원수를 계회수조를 통해 직접 취수를 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비상시 대책의 일환으로 취수원을 다중화 해 평상시에는 칠보발전 방류수를 동진강도수로 취수구에서 취수되 비상시에는 윤양수경 방류수를 동진강 하천 취수구에서 취수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취수원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환경부 관계자들과 만나 삼진강댐 가뭄으로 인한 수량 부족, 녹조로 인한 수질 저하 등에 대비하고 비상시 정읍권의 인공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담댐 비상연계 공급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김제계통 윤양수로(D700 L=139km) 활용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 올해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